

자유·평등의 실현 위한 사회혁명

프랑스혁명, 부르주아혁명인가 민중혁명인가

閔錫泓

서울대·서양사학

프랑스혁명 200주년에 즈음해 역사에서의 혁명을 공동주제로 한 제32회 전국역사학대회가 한국서양사학회 주관으로 5월 26~27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혁명의 개념」(盧明植·한림대), 「프랑스혁명, 부르주아혁명인가 민중혁명인가」(閔錫泓·서울대), 「신해혁명론」(閔斗基·서울대), 「동학운동, 반란인가 혁명인가」(鄭昌烈·한양대) 등 4편의 주제논문 가운데 두 閔교수의 발표요지를 소개한다.

혁명초기부터 등장한 민중이 혁명주도

1950년대부터 나타난 수정주의 혁명사가들은 프랑스혁명을 기껏해야 정치혁명이었다고 왜소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프랑스혁명은 반봉건적이고 반귀족적인 부르주아혁명이었으며, 단순한 정치혁명을 넘어선 사회혁명이었다. 그러나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부르주아지의 움직임이 아니라 귀족들의 반항이었다. 절대왕권에 굴복한 듯이 보였던 귀족들은 18세기에 다시금 귀족정치 실현을 꿈꿨다. 18세기 후반에는 '봉건적 반동'과 더불어 1788년에는 루이16세로 하여금 삼부회의 소집에 동의하게 했다.

부르주아지는 이 삼부회의 소집을 계기로 정치무대의 중심에 등장하고, 귀족을 대신하여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귀족의 연합세력 앞에 무력했고 군사력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민중이 부르주아지와 더불어 혁명초기부터 혁명세력으로 등장했는데,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혁명의 진행에 따라 그들의 비중이 점점 커졌으며, 특히 파리의 민중은 혁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파리민중의 개입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국민의회는 전국적 규모의 농민반란에 당혹했다. 그러나 농민들을 소외시키고는 혁명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부르주아지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권선언'을 채택했다. 1791년 헌법제정에 이르기까지 부르주아지가 원했던 여러 개혁이 일단 성취된 듯이 보였으나, 이 헌법은 시민을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구분하고 참정권을 전자에 국한시켜 대다수 시민들을 참정권에서 배제했다. 또 농민의 실질적 부담인 봉건적 공납을 되사게 함으로써 실망한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은 계속



민석홍씨

됐다. 샤플리에(Le Chapelier)법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금지함으로써 자본가에게만 유리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혁명초부터 부르주아지의 승리를 뒷받침한 도시의 민중과 농민들은 1791년의 자유주의혁명에 만족해야만 했던가고. 대답은 명백하다. 그들은 얻은 것이 없었고, 따라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국내에서도 反혁명기운이 고개를 들어 1791년까지 획득된 부르주아지의 승리마저 위협했다.

그러므로 혁명은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었다. 일부 수정주의 혁명사가들은 이를 '혁명의 일탈'이라고 주장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파리의 민중은 1789년 7월14일 바스티유를 습격, 혁명봉화를 올렸고, 농민들은 봉건제의 유제를 제거하기 위해 쫓겨났다. 1793~94년에 이르는 혁명과정은 1791년 혁명에서 소외됐던 민중이 공화국을 수립하고 더욱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나는 프랑스혁명에서 1793~94년 혁명을 빼버리면 프랑스혁명은 반신불수가 되며, 그것 없이는 '세계를 일주'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평등사회 주장한 '상 쥘로뜨'와 로베스피에르

그러나 프랑스혁명을 본질적으로 부르주아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민중혁명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긴다. 1793~94년 혁명의 주도세력은 파리를 비롯한 도시의 민중, 이른바 '상 쥘로뜨'였으며, 민중혁명을 상징하는 혁명가로는 자코뱅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를 꼽을 수 있다. 로베스피에르는 법 앞의 평등만이 아닌 경제적 평등을 강조했다. 그에

프랑스혁명은 부르주아혁명인가, 민중혁명인가. 도시민중이 혁명세력으로 등장, 실질적 평등사회를 이루고자 한 민중혁명은 좌절됐다. 그러나 바로 이 민중혁명이 있음으로 해서 프랑스혁명의 자유·평등 이념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의하면 "평등은 모든 선의 원천이며, 극단적인 불평등은 모든 악의 원천"이다. 따라서 "재산의 불평등을 증진시키는 모든 제도는 나쁘며, 사회복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민중을 바탕으로 한 '德의 공화국'을 건설한 것을 꿈꾼 것이다.

그러면 '상 쥘로뜨'는 누구인가. 수공업자와 소상공인, 소매상인, 특히 수공업자가 그 핵심적 존재다. 즉 소시민층을 주축으로 그보다 하층을 포함한 민중(menupeuple)이 상 쥘로뜨를 구성한다. 그들은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제시했지만, 대체로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 내지 산악당을 추종하고 영향받았다. 그들 주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평등주의였다.

상 쥘로뜨는, 인민에 의해 이뤄진 혁명은 먼저 인민에게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유의 평등'을 요구했다. 재산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빈부의 격차를 배격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상공업의 이윤과 혜택을 고정시키고 농업이윤의 범위를 제한하며, 최고재산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요컨대, 그들의 평등에 관한 요구는 때로 과격했지만 대체로 로베스피에르의 사회적 이상인 '상대적 평등을 보장하는 소생산자의 공동체'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한편 정치면에서 상 쥘로뜨는 철저한 인민주권설의 신봉자로서, 직접민주주의(이를 A. 소블은 '민중민주주의'라고 불렀다)를 지향했다. 행정부와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는 물론, 국민대표에 대한 심사와 통제를 주장하고 소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중혁명을 포용한 부르주아혁명

프랑스혁명에서의 민중적 이데올로기는 확실히 부르주아지의 그것과 이질적인 것이다. 많은 혁명사가들은 민중적 이데올로기가

회고적이고 미래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은 평등사회를 건설하려던 상 쥘로뜨와 자코뱅의 이상은, 자본주의 모순을 제거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는 움직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19세기 프랑스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빈부격차 없는 평등사회를 꿈꾸면서도,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제 부르주아혁명 안에서의 민중혁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우선 혁명曆 2년(1793~94년)의 민중혁명은 좌절했다는 것, 즉 프랑스혁명은 결국 부르주아혁명으로 끝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프랑스혁명은 전형적인 부르주아혁명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민중혁명을 가짐으로써 더욱 빛나고 오늘날까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역설적이지만 부르주아혁명으로서의 프랑스혁명이 거대한 민중혁명을 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프랑스혁명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청교도혁명에도 수평파(the Levellers)라는 민중운동이 있었으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혁명을 장악했지 주도하지는 않았다. 또 미국의 독립혁명의 경우, 민중운동은 매우 미약했고 그것이 사회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결국 사회혁명으로서의 부르주아혁명은 그 안에 민중혁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혁명의 민중혁명은 그 이상과 목표는 고귀했으나 공포정치와 자코뱅 독재를 수반했다. 그것은 민중혁명을 끝까지 성취하려는 비장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했다. 앞서 말했듯이 로베스피에르와 상 쥘로뜨는 결코 평등을 위해 자유를 부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즉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프랑스혁명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상으로 삼았으나, 민중혁명이 좌절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은 실패하고 자유는 사라졌다. 프랑스혁명은 어떻게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가의 과제를 남긴 것이다. 오늘날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실질적 평등의 달성이 미흡한 반면, 계급없는 평등한 사회건설에는 자유가 희생되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과 자유의 회복이, 프랑스혁명이 남긴 과제의 올바른 해결에 접근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